

규제개선으로

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















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

직업훈련·국가기술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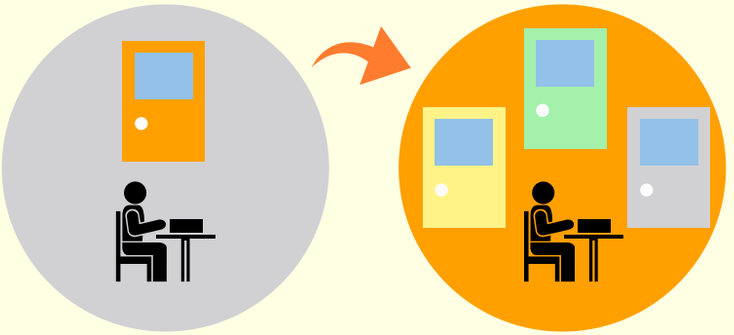
실업자, 재직자 등 구분없이 원하는 훈련과정에 쉽게 참여 가능



＊시행시기 : 2015. 1. 1.

✚실업자도 양질의 재직자 훈련과정(5만 개)에 참여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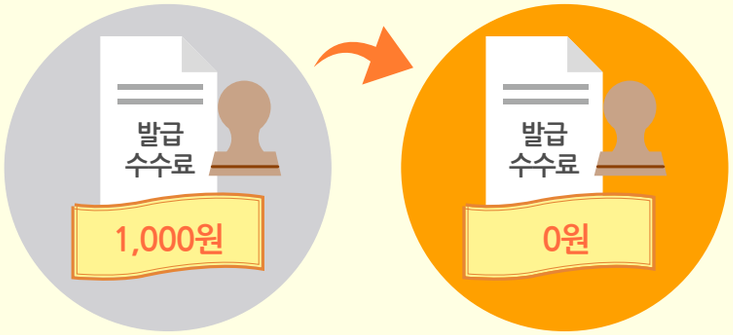
훈련참여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과정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훈련과정에 참석한 경우 출석 인정



＊시행시기 : 2014. 11. 7.

✚출결관리 기준의 유연화로 훈련비 지원 등에 불이익 감수 불편 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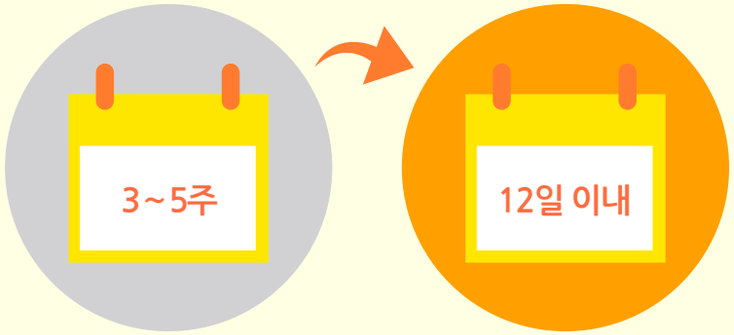
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폐지



＊시행시기 : 2014. 6. 12.

✚연간 약 18만 명(1억 8천만 원)의 수수료 면제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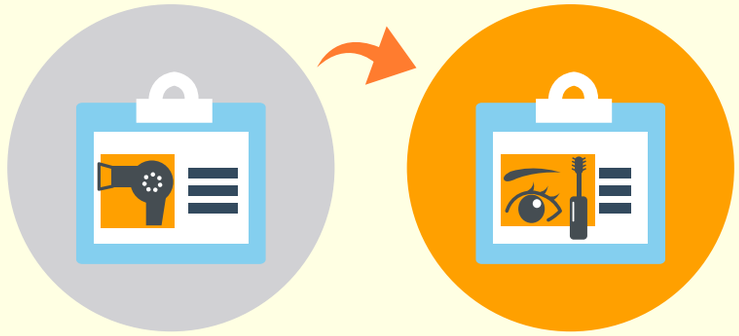
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실기시험 결과는 시험 종료일부터 12일 이내에 발표



＊시행시기 : 2015. 4. 3. (현장 채점종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실시)

✚발표일 단축으로 창업, 취업 등 자격증 조기취득 가능

메이크업을 미용사 자격종목에서 분리 메이크업 자격종목 신설



＊시행시기 : 2015. 1월

✚메이크업 기술 취득만으로도 메이크업 종사 가능



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

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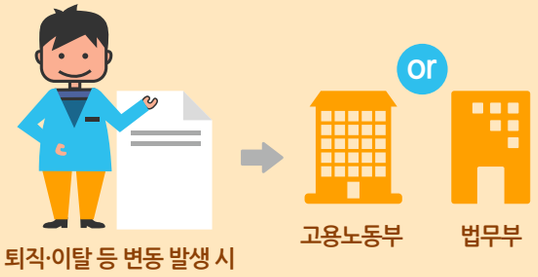
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인적사항, 신체정보 외에 과거 업무경력, 자격정보, 신체이상 유무 등도 제공



＊시행시기 : 2014. 9. 30.

✚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게되어 인력 선발에 도움

퇴직·이탈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변동 발생 시 고용노동부, 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접수·처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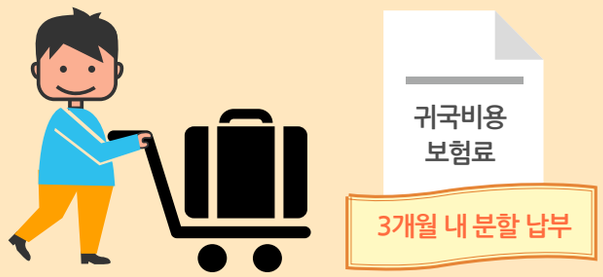
＊시행시기 : 2014. 10. 13.

✚ 연간 13만여 건의 신고 간소화로 57억여 원 절감

(입국 시)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납했던 귀국비용보험료, 일시납 또는 3개월 내 분할 납부(3회 이내) 가능

＊시행시기 : 2014. 7. 28.

✚ 보험료 납입 방법 개선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



고용주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허가서 재발급

＊시행시기 : 2014. 7. 28.

✚ 연간 4천여 건 이상 추가 발급 가능해져 사업주의 인력난 해소



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발생 시 신고의무 간소화



＊시행시기 : 2014. 7. 28.

✚ 신고 건수 연간 2만 5천여 건 감소

취업활동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기한을 만료일 전 60일로 통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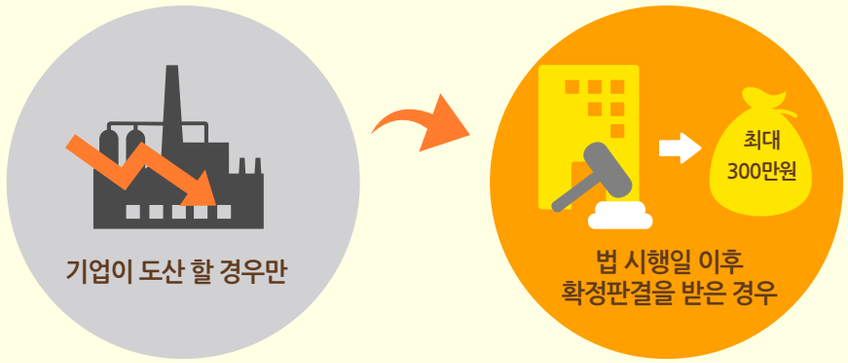
＊시행시기 : 2014. 7. 28.

✚ 신고 건수, 연간 3만여 건 감소

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

체불근로자 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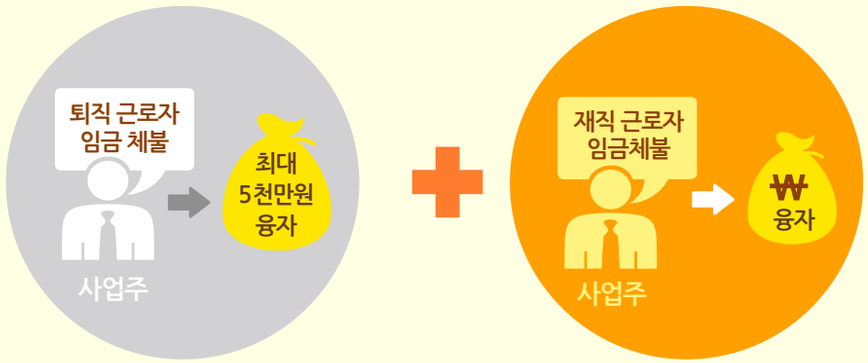
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 원의 체당금 지급



＊시행시기 : 2015. 7. 1. 예정(국회 논의 중)

✚ 연간 4만 천여 명(1천억 원)에게 체불임금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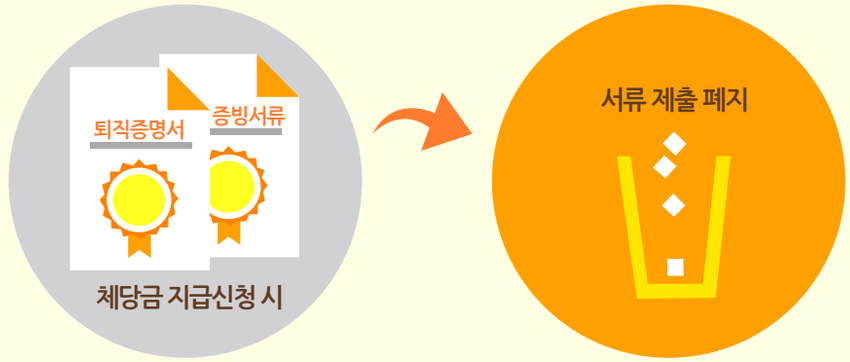
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때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



＊시행시기 : 2015. 7. 1. 예정(국회 논의 중)

✚ 연간 2천여 명(100억 원)의 체불임금 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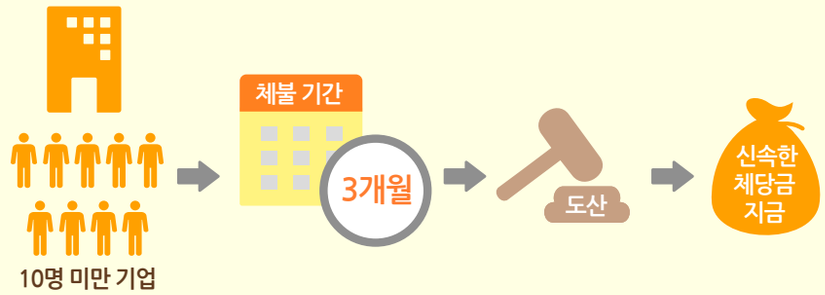
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신청 시 퇴직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 제출 폐지



＊시행시기 : 2015. 7. 1.

✚ 연간 5만여 명의 체당금 신청자에게 증명서 제출 부담 없앰

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, 도산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신속히 체당금 지급



＊시행시기 : 2014. 9. 2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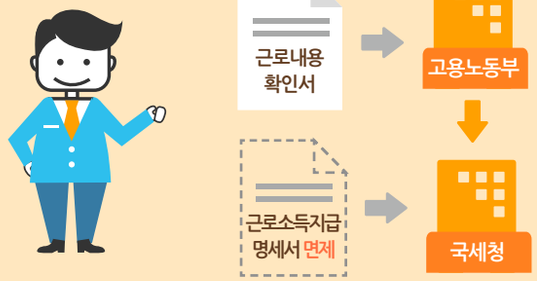
✚ 연간 체불근로자 7천여 명에게 신속히 체당금 지급



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

고용·산재 보험

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내야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면제



*시행시기 : 2014. 10. 1.

✚연간 1,800만 건에 이르는 중복신고 해소로 사업주의 신고 편의 제고

중복되고 복잡한 피보험자격취득서식 간소화



*시행시기 : 2014. 10. 1.

✚4대 사회보험 신고서 간소화로 사업주의 신고 편의 제고

고용·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모든 사업장에 허용

*시행시기 : 2014. 9. 25.

✚중소영세사업주의 납부 편의 제공 및 고용 · 산재 보험료 수납률 제고



고용·산재보험료 연체율 산정기준, 국민연금 · 건강보험과 통일

*시행시기 : 2014. 9. 25.

✚사업주 부담 완화



실업급여 수급 시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폐지



*시행시기 : 2016. 1. 1. 예정

✚연간 150만여 건의 이직확인서 신고 부담 경감

국외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신청 시 국내처럼 재해사실 확인 가능한 진단서, 진료기록부 등 첨부

▶해외 공증서 또는 재외 공관 확인서 제출 불필요



*시행시기 : 2015. 1월

✚국외 재해자의 행정편의 기대

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

산업안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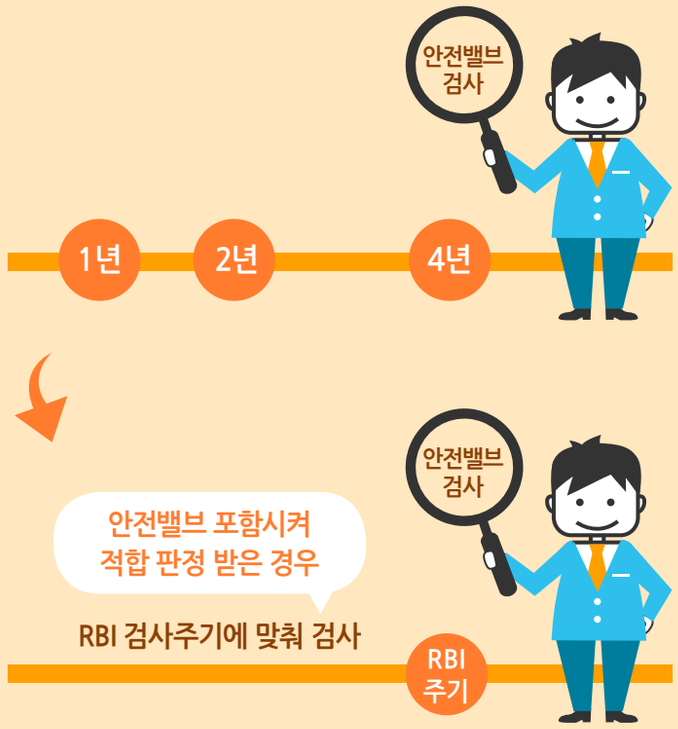
사업장에 전기 · 기계의 힘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할 경우 동력 차단에 대비하여 수동 개폐 가능하도록 해야 하나 대형 문에 보조출입문 등 별도의 수동 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



*시행시기 : 2014. 10. 1.

✚조선소 등 600여 개 사업장의 비용부담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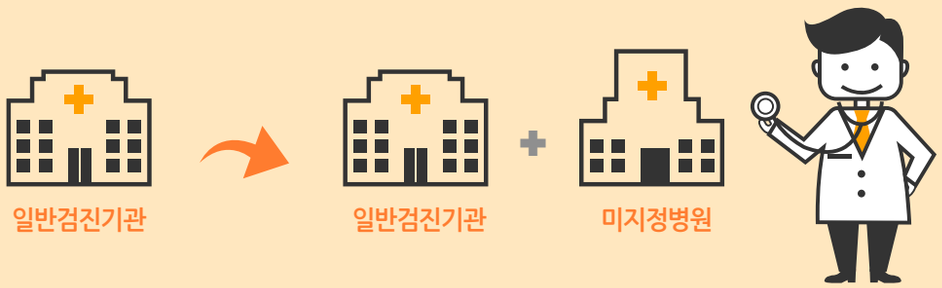
압력용기에 부속된 안전밸브 작동상태를 설치조건에 따라 1,2,4년마다 검사해야 하나, RBI(위험도기반검사기법)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RBI 검사주기에 맞춰 검사 가능



*시행시기 : 2014. 10. 1.

✚연간 안전밸브 검사 비용 1,300억여 원 절감

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나, 미지정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인정



*시행시기 : 2014. 7. 1.

✚연간 5만여 명의 근로자 편의 기대



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

일자리 창출

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기업 중 벤처기업, 지식기반서비스업, 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도 청년인턴 지원



＊시행시기 : 2014. 4. 1.

✚ '14.10월 기준, 5인 미만 기업 380곳에서 420명 채용

청년인턴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제조업 생산직 300만 원, 제조업 외 전 업종에도 180만 원 지원



＊시행시기 : 2015. 1월 예정

✚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

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확대

- 지원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(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)으로 확대
  ＊시행시기 : 2014. 1.
-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을 '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'로 한정했으나 '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약계층인 경우'에도 인정
  ＊시행시기 : 2014. 7.
- 전문인력을 채용한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
  ＊시행시기 : 2014. 1.



✚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고용창출 기대

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

-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 120% 이상(기존 130%)이면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
- 자녀보육,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
-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(임금, 근로계약기간)을 개선한 경우에도 임금의 일부 지원

＊시행시기 : 2015. 1월

✚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

